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수립·추진

Establishing and Driving of Pan-Governmental Countermeasure to Flood Disaster Prevention



김 형 렬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 하천국장

1. 추진배경

2002년에는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라마순”, “루사” 등의 영향으로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 총 3회(호우 1, 태풍 2) 수해로 재산 6.1조 원, 인명 270명 피해 발생)

지금까지의 수해방지대책은 행자부·건교부 등 개별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작년 홍수처럼 전국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한 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2. 9. 5 국무회의시 행자부장관께서, “범정부차원의 근원적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ask Force 구성·운영”을 보고하면서, 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시 나타난 문제점과 기존 수해방지대책을 정밀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2002. 11. 2 국무총리산하에 『수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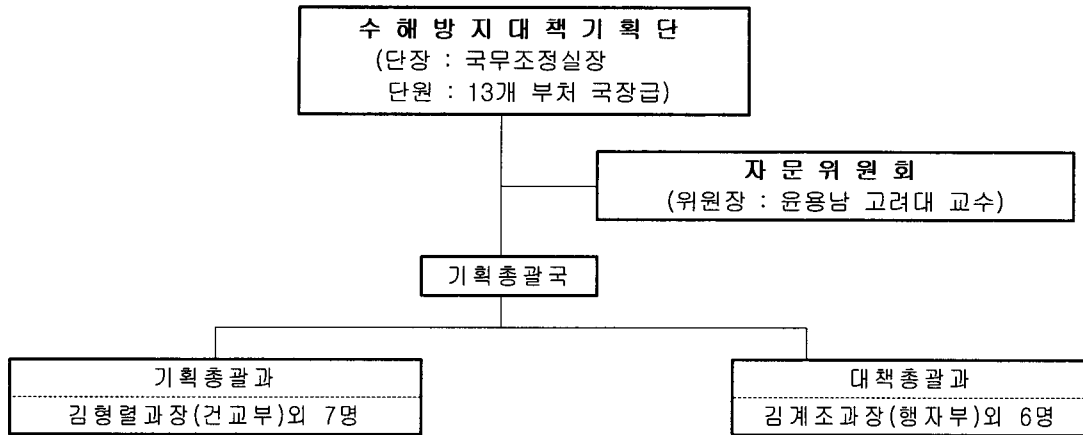
지대책기획단』을 설치하여(대통령훈령 제107호)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기로 하였다.

2.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주요기능 및 조직

가. 주요기능

- 1) 수해방지대책 수립
 - 기존 수해방지대책 점검 및 분석
 - 수해 극심지역 실태조사 및 대책의 문제점 발굴
 - 수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수해방지대책 투자재원의 확보 및 배분방안 마련
 - 범정부차원의 수해방지대책 수립
- 2) 대책추진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수해방지대책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부처별 대책의 집행상황 점검 및 평가
 - 부진과제 집행방안 수립 및 지원

나. 조 직



- 단원 : 국무조정실장(단장), 행자부·건교부 및 기획예산처 등 13개 부처 국장
- 자문위원회(위원장 : 윤용남 고려대 교수) : 유역치수, 재해관리, 농림연안 및 법령제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총 20명)

3. 추진경위

1) 수해방지대책기획단 발족 및 현판식 거행
2002. 11. 2 金錫朱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김진표 국무조정실장과 윤용남 자문위원장, 행자부·건교부 차관 등 참석하에 종로구 세종로 도림빌딩 1층에서 수해방지대책기획단 발족 및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2) 수해현장 실태조사 실시
현장의 사실에 근거한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2. 11. 12~14 및 12. 4~5 강릉·동해, 김천·영동, 김해·합안·합천 등 수해극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하천에 대한 건설(건교부) 및 관리(지자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농업용저수지의 홍수조절기능 미흡 등 문제점 발굴하였다.

3) 부처별 수해복구 및 수해방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2002. 11. 15~29 행자·건교·농림·해수·과기부·산림청·기상청 및 경기도 등 부처별 수해방지관련 주요사업(예 :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산사태 방지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4) 자문위원회 분과별 중점 연구과제 수행
수해지역 현지실태조사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2002. 11. 20~12. 31 자문위원회 분과별 중점 연구과제를 수행도록 하였다

- 유역치수분과 : 하천유역별 치수대책 및 산사태관리 등
- 재해관리분과 : 홍수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개선 대책 등
- 농림연안분과 : 재해예방능력 제고 및 농경지 배수처리 대책 등
- 법령제도분과 : 각종 설계기준 강화 및 재해영향평가 개선 등

5) 수해지역 실무자대상 설문조사 실시
지자체 건설과장과 수방관련부처 담당과장 등을

대상(277명)으로 2002. 12. 9~2003. 1. 20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사와 공동으로 지역별 수해빈발 원인과 근본대책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6) 수해방지대책 검토(안) 마련

자문위원회 검토, 현지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2003. 1월 수해방지대책 검토(안)을 마련하였는 바, 기존 수방대책의 개선·보완과제와 신규과제 등 총 80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7) 수해방지대책 검토(안) 관계부처 실무협의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해방지대책 검토(안)에 대하여 행자부·건교부 등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2003. 1. 8~15간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실시하였다.

8) 수해방지대책관련 Workshop 실시

수해방지대책 검토(안)에 대한 실무협의결과 이견조정을 위하여 2003. 1. 17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자문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전직원을 대상으로 Workshop을 실시하였다.

9) 수해방지대책(안) 관계부처 협의 실시

Workshop 등을 통해 검토한 수해방지대책(안)에 대하여 행자·건교부 등 13개 수방단 단원과 과기부 등 6개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03. 2. 4~28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였다.

10) 수해방지대책(안) 공청회 실시

수해방지대책(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3. 3. 7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지자체 공무원, 학계, 연구소 및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11) 수해방지대책 국무회의 보고 및 확정

법정부차원의 수해방지대책을 2003.4.8 국무회

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였다.

4. 수해발생 현황 및 원인

1) 수해발생 현황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매년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는 바, 지난 10년간(1993~2002) 연평균 인명피해 129명, 재산피해 1조 2,400억원이 발생하였다.

2002년에도 예외없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는 바, 8월 집중호우(8.4~11)로 양평 320 mm, 원주 305 mm, 이천 279 mm 등 많은 비가 내려 인명피해 28명(사망 22, 실종 1, 부상 5) 및 재산피해 9,181억원이 발생하였다. 태풍 루사(8.31~9.1)는 강릉 870 mm, 대관령 712 mm, 고흥 404 mm 등 전국적으로 사상유례없는 많은 비를 뿌렸으며, 인명피해 321명(사망 209, 실종 37, 부상 75) 및 재산피해 5조 1,479억원이 발생하였다.

2) 수해 발생원인

수해발생 원인은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 이외에 물적·제도적 인프라 부족에도 기인하는 바,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유출량 급증, 산지의 토사유출 및 유목 발생, 저지대 내수침수방지대책 미흡, 하천정비 미비 및 시설물 관리 미흡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기상이변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방 및 복구대책의 미흡에도 기인하는 바, 각종 수해예방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제도적 장치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부족, 수해 발생시 예산부족으로 개량복구보다는 원상복구 추진, 홍수 조기 전달체계 및 체계적 수해복구체계 미흡, 수해예방과 복구를 국가책임으로만 인식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지구노력 부족 등에도 기인한다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수방단에서 지자체 건설과장 등 수해현

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02. 12), 개량복구보다는 원상복구에 치중, 저지대 내수침수방지대책 부족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수해예방사업 지연 등을 수해재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사진 1 강원 강릉시 장현저수지 붕괴모습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5. 수해방지대책 기본방향

- 홍수예측 등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강화로 홍수피해 최소화
- 신속·철저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동일지역 수해 재발 억제
- 중앙·지방정부 및 국민의 역할분담으로 범국민적 대응체계 강화



- 수해지역 실태조사, 실무자 설문조사, 수해방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토대로 한 현장위주의 대책 수립
- 호우 및 홍수예측능력 강화 등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에 중점
- 수해관련 기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해예방능력 제고
- 철저하고 체계적인 복구추진으로 동일지역의 수해 재발 방지
- 수해에 대하여 중앙·지방정부 및 국민이 역할분담하는 범국민적 대응시스템 강화
- 중장기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수해에 강한 방재형 국토기반 구축
- 수해예방기반 강화로 국가부담 경감
-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 및 정부 신뢰도 제고

6. 수해방지대책 주요내용

가.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및 하천유역관리체계 구축

- 기상이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단기 종합치수계획 미흡
- 하천유역별 종합치수대책 수립·추진으로 홍수방어의 시너지효과 거양

1) 치수중장기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추진

- 필요성
 - 하천유역내 댐, 하천제방, 배수펌프장 등 각종 홍수방어시설이 부처별로 개별계획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

○개선대책

- 하천 유역별내 각종 치수사업에 대한 치수중장기계획 수립
-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홍수방어 시설간 연계운영 도모

2)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보완 및 하천정비 추진

- 필요성
 - 최근 집중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하천제방 등

각종 하천구조물의 치수안전도가 상대적으로 저하

○개선대책

- 최근의 이상강우를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기본 계획 수립·보완 및 하천등급 조정 추진
- ※ 정비기본계획 수립율 : 국가하천 98.5%, 지방1급 95.5%, 지방2급 41.5%
-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각종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

3) 신규댐 건설 및 기존댐 홍수조절기능 강화

○필요성

- 홍수조절효과가 큰 다목적댐은 신규건설이 부진하고,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댐은 홍수조절 기능이 취약

○개선대책

- 계획된 중소규모댐 건설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체계 강화
- ※ 댐장기계획 : '11년까지 한탄강댐 등 12개 중소규모댐 계획
- 용수전용댐 및 농업용저수지는 수문 설치 등을 통해 홍수조절기능 부여

4) 하천변 저류공간 확보 및 내수 배제능력 강화

○필요성

- 기존 하천정비 위주의 홍수소통만으로는 하천변의 내수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

○개선대책

- 하천변 저지대를 홍수저류공간으로 활용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및 배수펌프장의 효율적 설치·운영 유도

5) 하천관리조직 정비

○필요성

- 지자체가 국가하천을 행정구역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하천관리에 한계
- ※ 국가하천 : 65개, 2,782 km,
지방1급하천 : 55개, 1,334 km,
지방2급하천 : 3,773개, 26,118 km
-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이수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유역별 협력체계 구축 필요

○개선대책

- 국가하천 관리를 상하류 일관된 유역단위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통하여 유역종합치수대책 등의 효율적 추진 도모

나. 재해위험요인 조기 제거

○상습침수, 산사태 및 해수범람 등 각종 재해 위험요인이 산재되어 있어 홍수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 상존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기 대책 수립과 정비로 수해발생 가능성 사전 억제

1)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개선 및 정비 추진

○필요성

-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이 불분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
- ※ 재해위험지구(537개소) : 상습침수 406, 붕괴위험 69, 노후시설 61, 고립위험 1

○개선대책

-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강구

2) 농경지 상습침수 해소 및 노후수리시설물 개보수 추진

○필요성

- 노후된 수리시설물과 저지대 상습침수 농경지에서 홍수피해 빈발

※ 30년이상 노후수리시설물 50%, '45년이전 설치 저수지 54%

○개선대책

-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 수문, 용수로 등 수리시설물 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수해예방기반 구축

3) 산사태 위험도 평가 및 피해경감사업 추진

○필요성

- 전국적으로 산재한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이 지연

○개선대책

-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관리시스템 개발과 위험절개지에 대한 개선 및 예방·야계사방사업 지속 추진

※ 산사태 위험지구 : 103개소, 위험절개지 : 2,294개소

4) 연안침수방지대책 보완·추진

○필요성

- 해안선의 침수·침식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연안관리가 미흡하여 태풍·해일로 인한 침수피해 빈발

○개선대책

- 해안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연안정비 및 방조제 개보수 추진

- 조위관측소 증설 및 연안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조위관측소 : 14개소중 '02년까지 5개소 (영광, 안산, 마산, 후포, 대산) 설치 완료

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최근의 홍수피해가 노후된 하천시설물에서 빈발하고 있고 특히 하천제방과 구조물 접합부가 홍수에 취약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진단 및 보수·보강과 하천시설물 취약부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치수안전도 제고

1) 국가하천 기성제방 보강 및 구조물 접합부 설계·시공·유지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 기존 제방은 설계당시의 낮은 기술수준 등으로 구조적인 치수안전도가 낮고, 특히 하천제방과 배수문 등 구조물 접합부가 홍수에 취약

○개선대책

- 국가하천중 홍수에 취약한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 실시와 하천제방과 구조물 접합부에 대한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작성·시행

-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현실화하여 홍수예방기능 강화

2) 댐 및 저수지 안전성 평가·보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필요성

- 이상강우로 기존댐의 유입량이 설계당시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치수안전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개선대책

- 일정규모이상의 기존댐에 대하여 가능최대홍수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치수능력 증대

- 이상강우에 대비한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라. 하천시설물 설계기준 등 재정비

○ 하천시설물 설계기준 등에 최근의 이상강우에 대비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홍수피해 대형화 가능성 상존
 ○ 하천시설물에 대한 각종 설계기준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해 홍수피해 최소화

- 1) 하천시설물 설계 및 시공기준 보완
 - 필요성
 - 이상홍수에 대비한 설계빈도 등 하천시설물 설계기준이 미흡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지침 등 불충분
 - 개선대책
 -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설계빈도 강화 등 설계기준·공사시방서 보완과 유지관리지침 마련
 - 각종 하천구조물 설계시 수자원전문가 참여 제도화
 - 치수경제 분석지침을 보완하여 치수사업 효과 분석 기능 강화
- 2) 농업용 수리시설물 조사·설계기준 보완
 - 필요성
 - 농업용 수리시설물이 기상 및 농업여건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용수공급위주로 건설되어 홍수조절기능이 미흡
 - 개선대책
 - 농업용 저수지 설계홍수량 보완 및 사전방류를 위한 수문설치 등 수리시설물 조사·설계기준 강화

마. 수해방지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 이상기후 및 도시화 진전 등에 따라 수해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수해방지관련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홍수예측능력 강화와 수해저감기술개발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여 홍수피해 예방기반 구축

- 1) 수문관측관련 제도개선
 - 필요성
 - 홍수예경보 등을 위한 수문자료 관측조직·인력체계가 취약하고, 관측자료의 신뢰도 저하 및 공동이용체계 미흡
 - 개선대책
 - 수문관측 조직·인력 전문성 제고와 관측자료 공동활용체계 및 상시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2) 홍수예경보시스템 개선
 - 필요성
 - 유역면적이 적고 홍수도달시간이 짧은 주요지천의 경우 홍수예경보 등을 위한 유량관측자료가 불충분
 - 개선대책
 - 기존 홍수예경보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함께 주요지천에 대한 홍수예경보 프로그램 개선 및 단계별 시행방안 수립
- 3) 호우예측능력 강화
 - 필요성
 - 악기상 감시체계 부족으로 조기경보능력이 취약하고 수치예측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부족
 - 개선대책
 - 기상관측시설의 현대화와 전문인력 전문성 제고
 - 우리나라 기후 및 지형에 적합한 수치예보모델 개발·운영
- 4) 수해방지 기술개발 강화
 - 필요성
 - 자연재해중 수해가 80~90%를 차지하나, 수해방지를 위한 연구개발이 미흡하여 하천관련 기술수준 낮음
 - ※ 수해방지 기술수준 : 선진국의 20% 수준
 - 개선대책
 -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

기 위하여 수해방지 기술개발사업을 국가연
구개발사업으로 중점 추진

바. 재해대응 및 복구체계 개선

○재해 발생시 상황을 주로 지자체 보고에 의
존하고 재해예방·복구를 위한 종합적 계획
이 미흡하여 효율적 재해관리 곤란
○재해상황 실시간 관리 및 피해조사·복구체
계 개선으로 국민생활 조기안정 도모

1) 지자체 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 도시기본계획을 뒷받침할 방재종합계획이 미
흡하고 방재시설간 상호연계가 부족하여 사
전에방위주의 방재정책 추진 애로

○개선대책

- 지자체별로 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 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및 교
육·홍보 강화

2) 방재조직 및 재해상황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

- 재해대책본부는 비상설조직으로 재해관리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재해상황을
주로 지자체 등에 의존하여 효율적인 상황관
리 취약

○개선대책

- 재해대책본부의 상설화와 방재업무 인력보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실시간 재해상황관리를 위한 재해상황관리시
스템 구축·운영 및 홍수범람위험지도 제
작·보급

3) 홍수피해조사 및 복구체계 개선

○필요성

- 홍수피해 조사기간이 짧고 경험부족 등으로
정확한 피해조사에 한계

※ 최종피해 보고기간: 피해원인 종료(예: 기
상특보 해제)후 5일 이내

- 복구계획 수립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재해
대책의 기초가 되는 홍수피해 흔적조사 필요

○개선대책

- 홍수피해조사양식, 물량산출방식 등 전반적인
피해조사방법을 개선하고 홍수피해 흔적조사
제도화 추진

- 복구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수해복구공사 발
주제도 개선

4) 재해구호물자 지급체계 개선

○필요성

- 이재민 구호물자 분배는 중앙·지방·민간단
체가 각기 분담하고 있으나, 업무분담이 불명
확하고 부족구호품의 신속한 파악이 어려워
민원 및 이재민 불편 초래

○개선대책

- 재해구호물자 분배체계 개선을 위하여 이재민
구호물자 분배를 민간위탁하는 방안 추진
- 구호물품 공동구매, 광역구호물품 창고 등 구
호물품 관리·비축체계 개선 추진
- 구호물품 파악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사. 범국민적 수해대응체계 확립

○수해 예방과 복구를 국가책무로만 인식함에
따라 홍수 발생시 피해 확산 및 국가 재정
부담 증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방재의식 고취와
방재에 대한 국민참여 유도로 범국민적 수
해대응체계 구축

1) 방재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프로그램 강화

○필요성

- 방재교육 및 훈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과성 방송에 그쳐 대국민 홍보효과 미흡

○개선대책

- CD·Web 콘텐츠 등 다양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방재체험관 설치·운영 등 방재정보 전달수단 강구
- 방재교육 실시에 대한 평가제 도입 등 방재교육 활성화

2)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 사유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확대요구와 무상지원으로 인한 자발적 재해예방활동이 미흡하며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개선대책

-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홍수보험요율 추정을 위한 침수구역도 제작방안 강구



사진 2 경남 함안군 백산제 수해현황
(2002.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7. 투자계획

'03년도 수해방지대책 추진기간('03~'11년)중

약 42조원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비 34조원, 지방비 8조원 규모이다. '99년 수해방지종합대책상 투자계획 25.5조원(국비 20.1조원, 지방비 5.4조원) 대비 약 16.5조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부처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 43.9%, 행정자치부 21.0%, 농림부 17.4%, 환경부 9.6%, 산림청 5.9%, 해양수산부 1.4%, 기상청 0.8%이다

표 1 부처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부 처 별	계	'03예산	중기 ('04~'07)	장기 ('08~'11)
총투자비	427,920 (81,198)	35,677 (9,555)	259,070 (46,397)	133,173 (25,246)
건설교통부	187,811 (20,580)	12,218 (2,012)	130,431 (10,028)	45,162 (8,540)
행정자치부	89,698 (32,194)	3,177 (1,436)	45,423 (18,010)	41,098 (12,748)
농림부	74,236 (1,514)	6,270 (149)	33,638 (630)	34,328 (735)
환경부	41,282 (19,293)	11,070 (5,500)	30,212 (13,793)	- (-)
산림청	25,035 (4,954)	2,554 (369)	13,860 (2,324)	8,621 (2,261)
해양수산부	6,025 (2,663)	202 (89)	3,663 (1,612)	2,160 (962)
기상청	3,523	186	1,693	1,644
과학기술부	310	-	150	160

* ()는 地方費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 수계치수, 수해상습지 개선 등 수계종합정비사업 10조1,493억원
- 하천기성제방보강, 소하천정비 등 하천정비사업 9조3,361억원

표 2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 업 별	계	'03 예산	중 기 ('04 ~ 07)	장 기 ('08 ~ 11)
총투자비	427,920	35,677	259,070	133,173
· 수계종합정비 (23.7)	101,493	9,148	89,261	3,084
· 하천정비 (21.8)	93,361	3,324	44,320	45,717
· 농경지 수해방지 (17.3)	74,186	6,270	33,598	34,318
· 댐건설·보강 (13.1)	55,968	1,278	23,082	31,608
· 재해위험지구정비 (12.7)	54,250	4,173	35,133	14,944
· 내수배제능력강화 (9.7)	41,282	11,070	30,212	-
· 홍수예보능력강화 (1.7)	7,380	414	3,464	3,502

- 농경지 배수개선·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저수지 홍수조절기능 강화 등 농경지 수해방지사업 7조4,186억원
- 신규댐 건설, 댐 안정성평가 및 보강 등 댐 건설·보강사업 5조5,968억원
- 위험지구 정비, 사방댐 및 야계사방, 연안보전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조4,250억원
- 하수관거 증설·정비, 호우예측능력강화 등 내수배제능력 및 홍수예보능력 강화 4조 8,662억원

8. 향후계획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은 대책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